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정 요 섭

숙명여대 명예교수, 정치학



1. 머리말 : 대학이념의 동요

오늘날 대학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낡은 대학의 이념이 동요를 가져온 반면에 새로운 대학의 이념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데 기인한다. 즉, 오늘날에는 낡은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의 이념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에 대신해서 새로운 대학의 이념, 즉 사회봉사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이념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자의 어떠한 점이 보존되어야 하며, 후자의 어떠한 점이 조장되고, 어떠한 점이 경계의 눈으로 돌려져야 하느냐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의 이념은 오직 순수하게 연구와 강의의 장소로만 생각되었다. 말하자면 영원의 진리에만 봉사하는 장소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대학은 사회의 실생활에서 격절된 상아탑이었으며, 또한 대학의 연구는 직접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사회도 직접 대학에 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거기에 이른바 Akademische Freiheit가 인정된 것이다. 즉, 19세기 독일에서 발전한 학문의 자유(Akademische Freiheit)라는 전통적 이념은 교수나 학생이 반체제적 정치활동에 관계하는 자유까지 포함시킨 것은 아니었다. '학문의 자유'란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전통적인 전공분야의 연구나 교육을 하는 자유를 의미하였다는 사실이

그러나 현재는 다소 달라져가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은 진리탐구를 통해서 사회나 국가에 봉사하는 '서비스 스테이션'(service station)의 의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봉사적 대학의 이념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많은 대학에서 상아탑적인 연구의 면과 사회봉사적인 면이 병립하며 그 양면의 관계가 명료하지 못한 데 혼란과 복잡한 문제가 대학의 자유와 자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학생운동이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대학의 기능 변화, 즉 상아탑의 장에서 사회봉사의 장으로 옮겨져 가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광복 이후의 굴절된 정치사 속에서 우리의 대학은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상아탑'이기보다는 정치상황과 시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狀況塔'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우리나라 학생운동이 이 땅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정착시킨 데 대해 그 업적을 과소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군사독재정권의 강권정치에 맞서 생명까지 버려가며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웠던 학생들의 순수한 이상과 열정을 국민들은 잊지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학생운동은 주사와 파동에서 보았듯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미 실패로 끝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시대착오적인 학생운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이제 분명해졌다. 따라서 주사와 학생들이 낡은 이념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대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최근 서울대가 한동안 실종됐던 면학분위기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루탄과 화염병 대신 캠퍼스에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흐르고, 살벌한 구호와 격문들로 가득했던

게시판엔 문화예술공연과 교양강좌를 알리는 포스터와 그림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대의 바람직한 변화는 다른 대학에도 파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학들도 정치 투쟁이나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의 전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대학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리의 발견과 전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대학 자신이 정치력을 가지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회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실천하며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대학의 연구와 사회의 실천과의 相異를 말살함으로써 양자간의 마찰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사회는 직접적으로 대학으로부터 봉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 대해서 연구와 강의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학으로부터의 사회에의 봉사를 기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학문의 자유'와 이적성

대학은 진리탐구와 인간형성의 양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쟁취해 왔다. 대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참다운 진리탐구와 올바른 인간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유가 위축될 때 창조적 활력을 상실하고, 특정 세계관이나 가치체계만을 관철하려는 이른바 사상의 강제수용소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예를 우리는 공산혁명과 김일성 독재체제, 나치즘, 파시즘을 비롯한 권위주의 독재체제하에서 대학의 존립양식을 통해 경험적 사실로 보아왔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학문의

자유와 자율—자치—은 대학의 생명이다.

우리가 영위하는 민주주의도 학문연구에서 비판의 자유가 보장될 때 진정으로 인간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최근 검찰에서 한 국립대학의 교양교재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문제삼아 수사를 벌일 때 한편에서는 정부의 사법처리 시도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옹호하고 지지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학문의 자유는 어느 선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좀더 나은 사회를 갈구한다면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뜻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사실 자유의 무정부적 무조건적 보장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원래 학문의 자유는 17세기 영국에서 베이컨과 밀턴 등에 의해 주장된 이래 헌법의 차원에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849년 프랑크푸르트헌법을 비롯하여 1850년의 프로이센헌법과 1867년 오스트리아헌법에서였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학문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해 왔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볼 때, 학문의 자유는 독일에서는 講學的인 자유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시민의 자유라는 성격으로 보장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학문의 자유를 명시해 왔다. 현행 헌법도 제2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 제한의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헌법 제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자유인가 하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도 구체적·단계적 발현 현상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즉, 학문의 자유도 그것이 사회적 전파의 효과에 따라서 제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학문의 자유가 상황에 따라 제한받을 수밖에 없지만,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하여 확립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이 적용되어 학문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되, 명백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19년 미국의 홈즈 대법관에 의해 세워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서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원용되는 원칙이다.

이번 경상대학교 교양과정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이적성에 대한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이 원칙이 명시되었으나, 기각사유에서 원용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성 원칙을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林效元稿: “學問의 자유와 명백하고 現存한 危險”, 『民族正論』, 1994년 10월호, 통권15호, 41면~42면 참조).

사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속에서 어떤 학문이 선동적이며 이적성이 짙은 특정한 정치적 색채를 일방적 배타적으로 강하게 띠거나—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강하게 띠거나—분단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정체성마저 정면으로 도전·위협받을 때 학문의 자유는 절대적 무제한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선동적·배타적·폐쇄적·일방적·광적인 이데올로기의 주입 아닌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가치중립적인 학문—지식—의 자유는 한계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에 대한 책임이 주어질 뿐이다. 지식은 현실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것이 또한 자유롭게 추구되는 학문이 져야 할 의무이다. 학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권리는 역사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기도 하다.

최근 경상대 교양과정 교재에 대한 검찰의 이적성 수사를 보는 심정은 매우 착잡하다. 무엇보다도 역사에서 이미 실험과 평가가 끝난 낡은 이론들을 아직까지 우리 국립대학에서 '가장 과학적인 이론'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이것이 대학 내에서 학문적 토론을 통해 여과되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대상까지 올랐다는 것이 더욱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또한 아무리 교재선택이 교수의 고유권한이라 해도 자유민주체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주장이 담긴 교재에 대해 학내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혹자는 『한국사회의 이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叛亂學'이라고 평가까지 한다. 그들 집필자들은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마을마다 대자보를 붙여 항쟁하자"고 한 대목은 빼고 점잖은 부분만 골라 그 내용을 소개하여도 엄청난 叛亂學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自由新聞』 사설; 1994년 9월 10일자, 2면 참조).

첫째, 이 책은 학생들에게 부르주아 사회과

학을 하지 말고, 마르크스 사회과학을 하여 사회주의 혁명에 앞장서라고 가르친다.

둘째, 이 책은 사회주의가 망하지 않았다고 가르친다. 즉, 최근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 공산권의 사회주의도 붕괴하였으나 그것은 자본주의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계속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고 계급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렇게 오늘의 세계정세를 오관하게 유도해 놓고 이 책은 김영삼 정권이 노동자·농민의 민중해방운동을 교묘하게 억압하는 반동정권이라 규정하고 있으니, 국립대학의 교양교재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나라는 어디에 또 있을까.

넷째, 이 책은 한국 근대사와 현대사를 북한의 『조선전사』와 똑같은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근대사는 갑오농민전쟁 이후 노동자·농민의 즐거운 민족해방투쟁사로 꾸며져 있고, 지금도 그것이 조국해방투쟁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공작시에 기본지침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조국이 과연 어디인가. 이 책의 집필자들에게 조국이란 주체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국가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몸담고 있는 남한은 식민지일 수밖에 없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미제식민지로 변한 남한을 해방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통일이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이데올로기를 타파해야 민족국가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느니, "6·25는 도발이 아니라 남한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등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혁명을 부추기는 이적성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물론 대학에서의 학문과 연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학회지나 연구논문 등을 통해 어떤 진보적인 논리나 주장도 자유롭게 제기되고 토론되는 것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대학교재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도 당국의 수사가 자칫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계급혁명을 부추기는 주장을 담은 책이 어떻게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교양과목의 교재로 채택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교재가 아직 학문적인 판단력이 미숙한 단계인 1, 2학년의 교양과목 교재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학교당국의 행정상의 무신경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아무래도 특정한 하나의 광적인 주장이나 학설이 아니라—이데올로기의 설파가 아니라—인류 역사를 통해 명멸한 다양한 학설의 소개이며 동시에 앞으로 바른 학문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론의 비교 안내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름아닌 학문의 자유를 위한 올바른 지성의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일부 교수들이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처음부터 편향성이 강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다른 주장이나 학설은 아예 배제했다고 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올바른 비판의 자유를 누리는 정당한 행위로 보장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 견해나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수는 학생들에게 마약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전제의 학문’을 주장했던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도 “예언자나 선동자

를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그것은 교수가 예언자나 선동자처럼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3. 대학은 주사파학생들의 천국인가

오늘날 한국에서 대학 이름만 붙은 곳이면 으레 해괴한 구호들이 난무해 있다. 무엇이든 규탄하고 부정하고 매도하는 방들이 구내 요소 요소에 붙지 않은 곳이 없다. 무당 굶하는 데서나 볼 수 있는 울긋불긋한 천들의 플래카드, 지식인 티라고는 어느 한 군데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몸가짐이며 목소리들. 그것이 예나 이제나 조금도 변화없이 횡행하는 곳이 한국의 대학이다. 이와 같이 대학은 이미 교육의 장으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했다. ‘민중운동 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대부분 학생들의 절대적 행동기준이 되어 학업보다는 운동이 보다 중요한 가치를 차지했다. 운동을 위해서는 수업에 결석해도 좋고, 심지어 졸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조차 있었다. 이유는 ‘제도권 대학’의 졸업장은 필요없다는 논리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학교 내에 ‘해방구’를 설치하여 이 곳을 자신들의 자치지역으로 선포하고 꾸짖는 교수는 어용 교수로 몰아붙이거나 폭행까지도 감행했다. 이들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맹렬한 혁명투사로 자처한다.

최근 국회 내무위에서 김화남 경찰청장은 보고에서 “주사파는 총학생회가 구성된 162개 대학 중 52%인 84개 대학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91년 이후 모두 57개 대학에서 북한과 팩시밀리 116회, 전신 38회, 전화 2회 등 모두 156회의 불법통신이 있었으며 관련자 124

명을 검거,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한국일보』, 1994년 8월 6일자, 2면).

오늘날 외세배격 등을 내세우며 김일성 주체사상의 교리에 맹종하는 대학가의 주사파는 지난날의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민주화를 부르짖던 순수한 학생운동과는 그 뿌리부터가 다르다. 다만 그동안 민주화운동의 보호막 속에 그들의 정체를 숨기거나 위장하고 있었을 뿐이다. 한동안 주사파의 활동과 선의의 학생운동 사이에 혼선이 있었던 것도 ‘민주화의 우산’ 아래 그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홍 총장의 ‘용기있는 발언’에 이어 전대협·한총련 등이 지난 4년간 북한 대학과 팩시밀리로 교신해 왔다는 경찰청장의 발표는 이들의 친북 노선을 백일하에 밝혀주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대학가에서 ‘김일성 서거 애도’ 유인물과 대자보가 나돌고 분향소가 설치되는가 하더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당 상에서 ‘조문단 파견’의 공식제기로 야기된 파문은 전국 수십 개 대학으로 다시 확산되어 유사한 주장의 대자보와 플래카드가 대학가에 내걸렸다. 이는 또 북한 조평통의 대남 조문환영 성명을 이끌어 냈으며, 이 성명에 한총련이 답하는 형식으로 마치 미리 짜고 한 듯한 입체적 팀플레이가 연출되었다.

한국 대학은 주사파들의 천국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이 지구상 어느 나라 대학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주장과 행동을 용인해 줄 것인가. 가장 시대착오적이고 가장 후진적인 그러면서 ‘진보’라는 용어로 각색된 이들을 어느 대학이 감히 용납할 것인가. 시대에 단순히 뒤진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황폐하고, 정신적으로 왜곡된 이들을 어떻게 대학이라는 이름의 광장에서 확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지난 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로 감형된 이후 12년간 옥살이를 했던 재야운동가 김현장 씨는 8월 15일 국민대 본관 212호 강의실에서 가진 ‘남북 상황과 학생운동의 방향’이란 강연에서 “주체사상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대상황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낡은 이론”이라며 학생운동이 담보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경향신문』, 1994년 9월 16일자, 23면 참조).

심지어 일본 공산당 기관지 『赤旗』가 주체사상의 인간중심론은 비과학적이며, 반동적 관념론이라고까지 비판하였던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운동권에서는 최근에 야기된 남북정상회담과 조문 문제를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통념을 깨고 운동권적 논리의 보편화와 합법성 강화를 이룩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을 것이다. 김일성과 북의 체제에 대한 국민의 오랜 금기 의식과 혐오감을 일거에 희석시키고, 반대로 김일성과 북에 대한 호의와 친화를 일시에 확산시키는 데는 정부차원의 조문사절 파견만큼 더 효과적인 것이 없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 운동권은 고기가 물을 만나는 격의 대세를 얻게 될 것이며, 그들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명분과 근거를 잃을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문까지 하는 판인데 그들이 ‘민족해방’을 부르짖은들 그것을 무슨 세로 막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야말로 세상의 대세가 바뀌는 셈이 되는 것이다. 김일성 조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해를 위해’ 히틀러 묘소를 참배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김일성 북한주석 사망

에 대한 정부조문사절 파견 또는 조의 성명 발표 주장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비극적이다. 김일성은 수백만 민족에 죽음과 고통을 강요한 6·25의 도발자이자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등을 자행하고도 이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김일성의 책임을 사후에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조문 주장에 분개하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김일성은 조국분단과 동족상잔에 책임을 져야 할 '전범'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일부 야당의원들의 주장대로 우리 정부조문사절단이 평양을 찾아가 김일성의 관 앞에 고개를 숙인다거나 조의성명을 발표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필경 북은 '위대한 수령'의 죽음에 남반부 정부와 인민들까지 슬퍼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라 하겠다.

4. 민주주의의 함정

우리는 김일성의 죽음에 대하여 남한 정부의 조문단 파견이 왜 위협성이 있는가를 북베트남의 호치민이 죽었을 때 남베트남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李大鎔稿, “胡志明이 죽었을 때……”, 『조선일보』, 1994년 7월 20일, 5면 참조).

1969년 9월 3일 베트남민주공화국(北越) 주석 호치민(胡志明)은 병상 주위에 모인 정치국원들에게 베트남통일을 이루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호치민 주석의 사망을 알리는 보도가 북월 매스컴을 통하여 발표되자 온 세계의 신문과 방송은 떠들썩했다. 카리스마적 절대권위를 가지고 있던 최대의 공산독재자가 죽었으니 북월은 운세가 크게 기울고 남

월이 북월을 제압할 수 있는 호기가 도래했으며 미래는 남월 편이니 이제는 됐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남월 국민을 지배했다. 이때 남-북 베트남의 경제력은 남월이 북월의 2.5배로 이미 큰 격차가 벌어져 있었다. 어쨌든 북월의 형세는 서산에 기우는 해와 같다는 것이 절대다수 남월 국민들의 견해이며 호치민이 죽은 것은 하늘이 남월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며칠 지나자 남월 국회의 큐몽트 의원, 찬녹차우 의원, 사이공 대학교 총학생회장 힌탐맘은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 호치민은 우리와 싸워온 상대이긴 하지만 프랑스 식민시대에 반프랑스 투쟁의 선두에 섰으며 일본침략군을 몰아내고 현재 진행중인 파리 4자 평화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공헌한 바 있으며, 또 파리 4자 평화회담을 앞으로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도 북월에 대한 '당근 정책'으로 최소한 호치민의 서거에 대해 조의표명 정도는 남월정부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여기에 톡치광(釋智光) 스님이 동조하고 반공투사로 이름난 찬반튀엔(陳文典) 국민당 당수도 동조를 했다. 그는 북월의 수상인 판반동과 하노이 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며 학생시절에 가까운 친구였다. 이 친구에게 당근을 내밀어 남북화해와 동족상쟁의 전쟁을 끝내려는 의중이었다.

티우 정권은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였으나 사이공 대학교 기숙사에는 호치민 분향소가 설치되고, 큐몽트 의원 지지자들도 여기저기 분향소를 설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후 5년 반의 세월이 흘러갔다. 호치민이 죽었을 때의 예상과는 달리 1975년 4월 30일 북월은 무력으로 남침하여 적화통일을 달성했

으며 남월(베트남 공화국)은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남월이 멸망한 후에 호치민 조문파인 큐몽트 의원, 찬녹차우 의원, 헌탐맘 총학생회장 등은 북월 노동당 프락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큐몽트와 헌탐맘은 적화통일 후에 인민대의원(국회의원)에 선출됐다. 반면 공산프락치가 아니면서 유화 당근정책으로 호치민 조문파인 찬반튀엔 국민당 당수는 체포되어 정치범 감방에서 옥사했다. 탁치광 스님도 체포되어 정치범 감방에 수감되었으며, 옥사했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1969년 6월 6일 남월민족해방전선이 개편되어 남월 임시혁명정부(베트콩)가 수립될 때, 그 정부의 법무장관에 임명되어 7년간 그 자리에 있던 총뉴탄의 후일담에 의하면, 그는 캄보디아 국경 부근에 있는 그들의 청사인 지하땅굴 속에서 사이공정부의 각 부처가 한 극비회의 내용도 그 다음 날이면 자기들에게 보고되었으며 티우 정권의 모든 비밀을 자기 손금 보듯 꿰뚫어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남월(베트남 공화국) 국회에만 큐몽트 의원 등 11명의 공산프락치가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남월정부 각처에 북월 공산프락치가 박혀 있었다. 군의 요직과 도지사(성장)를 지낸 함속타오 대령은 세기의 간첩인 소련의 조르게에 맞먹는 거물공산간첩이었으며, 웬반하우 농림 장관 겸 경제담당 부수상도 공산프락치였고, 웬후코 국방장관도 공산프락치였다. 대통령궁인 독립궁보좌관 중에도 공산프락치가 있어 남월폐망 직전에 체포되기도 했다. 공군의 이름난 파일럿 웬충탐도 공산프락치였다. 적화통일 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남월에서의 노동당 당원수는 약 9천 5백 명이었고, 노동당의 4촌격인 인민혁명당 당원수는 약 4만 명이었다.

남월 인구 1천 9백 50만 명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핵심이 되어 당원 아닌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동조세력도 많이 만들어 선동하고 지휘했다. 노동현장, 정치현장, 경제현장, 사회현장, 문화현장에서 어떤 틈만 생기면 이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갔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즉, “접동새(삿갓새)라는 새는 자기 자신의 둥지를 틀지 않고 ‘피꼬리’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는다는 것이다. 피꼬리의 어미새는 접동새의 ‘알’과 자기가 낳은 ‘알’을 차별하지 않고 품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접동새의 알은 피꼬리의 알보다도 부화 일수가 짧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접동새의 알이 먼저 병아리가 되어 점점 성장하여 그 둥지를 독점하고 피꼬리의 알을 둥지 밖으로 내밀어서 지면에 떨어뜨려 모름지기 깨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거울삼아 휴전선 북쪽 평양에만 정신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휴전선 남쪽을 주시하여야 한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사망으로 이끄는 암적 세포인 국내 공산 친북세력에 대하여 지금같이 미온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일체감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남월의 전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보수-진보’ 개념의 새로운 정립

요즈음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허구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북한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하여 온 나라를 한바탕 이념전쟁과 국론분열의 와중에 빠뜨린 ‘조문론 파동’을 지켜 보면서 조

문론자 자신들은 물론이고 상당수 언론이 조문을 주장한 사람들을 진보론자·진보측 또는 진보주의자로 지칭하고,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을 보수론자·보수측 또는 보수주의자로 표현한 사실이다. 더욱이 참으로 해괴한 일 중의 하나는 김일성을 조금이라도 싫어하거나 나쁘게 묘사하는 것은 ‘보수-수구’이고, 그에게 될 수 있으면 좋게 대해주는 것이 ‘진보’라고 가르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서총련, 남총련, 조문파, 주사파, 친북파는 진보이고, 그것들을 비판하는 쪽은 보수요 수구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이런 분류법은 엉터리 무지의 소산 아니면 친북파들의 의도적인 음모에 놀아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진보’라는 낱말의 뜻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츰 차츰 나아지거나 나아가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물의 내용과 정도가 발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진보 또는 진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변화 또는 변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그 변화와 변혁이 반드시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물러서거나 잘못되어 가는 것일 때에는 퇴보 또는 퇴보적이라고 표현하여야 마땅하다.

공산주의는 국제적 실험을 통하여 실패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물론 가까운 북한에서는 아직도 자기식대로의 공산주의를 주창하면서 인민들의 낙원을 환상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민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존권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공산주의는 더 이상 인류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좇아가는 것은 차츰 나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치는 어리석음을 밟는 것이다.

따라서 북의 체제나 김일성은 결코 진보일 수가 없다. 자유, 평등, 박애, 민주, 인권, 법치주의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세습 전제군주 사회인 북이 도대체 어떻게 진보라는 말인가.

심지어는 야당 대변인까지도 서총련 도시게릴라 대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수구세력에 빌미를 주게 되고 오히려 학생들의 목적달성에 해가 된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성명을 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김일성주의자 그 자체인 서총련 도시게릴라들에 반대하는 측을 일괄 ‘수구세력’으로 못박아버린 야당 대변인은 어느 편에 속한다는 말인가. 건전한 지적 도덕적 자질을 구비하면서 북이나 주사파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민주적 개혁주의자의 스펙트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야당 대변인은 일견 ‘反주사파=몽땅 수구세력’인 양 단순화해 버렸다. 이런 분류법은 넌센스요, 결과적으로는 주사파들이 번식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명색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책임있는 정치인과 언론이 보수·진보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이 안돼 있다고 생각하니 입맛이 씹쓸할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개념의 혼돈을 정리할 결정적 단계가 아닌가 한다.

그러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과거를 교훈삼아 좋은 전통, 좋은 경험, 좋은 가치를 밝은 미래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도리어 역사발전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물론 지난 날의 모든 것에 집착하는 수구적인 태도나 가치관은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 그야말로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벽이다. 수구와 보수는 이처럼 천양지차가 있다.

이 땅에서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적 입장을 살펴보면 철저한 반미, 미군철수, 북한정권

용인, 6·25 민족해방전쟁론, 북침론, 반한친 북성향, 주사파, 사노맹, 거기애다 수령론과 최근의 조문론까지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은 건전한 신보수주의자, 건전한 민주개혁주의자가 안보를 논하기만 해도 북하면 매카시즘,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주의·주장들이 좌경급진사상이라고는 할지언정 어떻게 진보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급진좌경이 진보로 둔갑하는 심각한 하나의 개념 전도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우리들의 사고를 혼란케 하는 것은 '민주화'를 외치면서 반민주화를 실천하고, '학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학문의 폐쇄화를 실행하는 세력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반독재 민주화투쟁세력을 자처한 사람들이 김일성 주사파가 되고, 학문의 자유와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퇴보의 편향논리를 펼치는 아이러니가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며, 이와 같은 개념의 전도현상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아직 보수와 진보가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의 시기는 수구와 개혁의 대립기이다. 지금은 개혁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보수할 만한 가치들을 창조하고 축적하는 시기다. 가치들이란 입헌전통,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사법권 독립, 인권존중, 경제정의, 균등배분, 국민통합…… 등이다.

그러한 역사적 전통과 가치가 우리 사회의 기저에 축적돼 흔들림 없는 기반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수구와 급진의 극단적 대결이 사라지고 보수와 진보가 마차의 두 수레바퀴처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고 나갈 것이다.

요컨대 '진보는 결코 친북과 등식화 될 수 없음'을 언론을 통해서 널리 국민을 설득시키고, 참다운 진보는 자유, 민주, 복지의 전면적

심화에 있는 것이지 개인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말살하는 북한식 전체주의에 있지 않음을 당당히 국민을 계몽시켜야 한다.

아무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숙하고 북한을 압도할 만큼 우월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김일성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 우리 체제에 도전하는 좌경극렬 학생운동까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계 어디를 돌아봐도 자기네 체제에 정식으로 도전하는 '내부의 적'까지를 우리처럼 흐리멍텅하게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흔들림 없이 내부를 굳건히 다지면서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명백한 친북주사파의 폭력세력의 실체를 규명하여, 이들이 북한과 내통한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고 범국민적인 협조를 얻어 발본색원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요컨대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6. '학문도야의 장'으로서의 대학

우리나라 대학생이 학문적 연구보다 정치성향을 강하게 띠게 된 데 대해서는 우선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치가들이 크게 반성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생 자신들이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깊은 사색이 필요하다. 이제 대학은 순수한 학문의 전당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허위의식으로 일관된 어떤 이념으로부터도 오염되지 않는 상아탑이 되어야 한다. 대학 캠퍼스는 더 이상 '정치집회의 장'으로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캠퍼스는 운동권 학생들의 집회만이 아니라 정치색을 띤 각종 모임으로써

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최근 서강대와 건국대를 비롯,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각 대학이 교내에서의 정치집회를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뒤늦게나마 대학을 '학문도야의 장'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대학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이제 학생회에 질질 끌려다니는 대학이 돼서는 안 된다. 대학 총학생회가 추천한 강사간첩혐의자였고, 그가 3학기 동안 강의한 내용이 주체사상이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대학의 교과운영이 이토록 허술하고 무성의했던가. 대학의 교권이 학생회 앞에서 이토록 무력했던가를 새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시간강사 배정에 총학생회가 간여하고, 그들이 추천한 강사를 대학당국이 아무런 여과과정도 거치지 않고 3학기씩이나 맡겨왔다는 점은 어딘가 허술한 행정상의 허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문제의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강좌도 대학감사에서 이미 오래 전에 이적성여부가 제기되었지만, 대학당국이 학생회 눈치만 보면서 폐강시키지 못한 채 지금까지 끌어왔다고 한다. 검찰 수사로 여론화되자 그제서야 교무처장은 회의를 열어 폐강을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같은 여러 현상들은 대학운영을 책임진 대학당국,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교수들이 자신들의 소임과 소신을 포기하거나 방치한 결과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수는 학생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강단의 한낱 장인으로 안주하는 '허약한 지식인'이어서는 안 된다.

대학운영의 핵심적인 주체는 대학교수이고, 그 중 가르치는 행위는 교수의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교권은 정당하게 존중되고 교권확립을 위한 교수의 권위는 언제나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7. '대학 정상화'를 위한 곧은 목소리

앞서 언급한 일부 대학이 교내에서의 정치집회를 거부한 것 역시 '대학 정상화'를 이룬 대학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 하겠다. 대학을 지키려는 대학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다른 대학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당국도 신성한 교육의 장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하겠다는 대학인의 결단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전 전남대 교수들의 성명과 서강대 경영대 교수들의 박홍 총장 발언 지지성명, 20개 대학 총장들의 '곧은 목소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오염된 사상을 전파하고, 대학의 황폐화를 부추기는 좌경폭력세력에 대한 대학당국의 철저한 대응책이 시급히 기대된다고 하겠다.

특히 서울대 등 20개 대학 총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박홍 서강대 총장의 발언에 대한 지지와 함께 우리 사회의 좌경·폭력세력을 뿌리 뽑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대학총장들의 이러한 이례적 결의는 대학가에 침투한 좌경·폭력세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한양대 교수 20여 명이 주사파 학생들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였다고 한다. 교수들이 집단으로 운동권 학생들의 주장과 행동을 꾸짖기는 지난 7월 전남대 교수들에 이어 두번째다.

교수들은 '일부 극렬운동권에 대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제하의 대자보를 통해 "경찰서 습격, 열차탈취 등 최근의 학생난동은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지난 60, 70년대의 학생운동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하고 학생들은 조속히 환상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물론 오늘날의 일부 학생운동권이 북한의 김일성 사상을 추종하고 폐쇄사회를 공공연히 찬양하게끔 된 데는 지난 날 우리의 굴절된 정치사에도 책임의 일단은 있다. 혹자는 주사파 학생집단은 정치 지도자들이 양성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사상적 진로를 바로 잡아주고, 선도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대학당국과 일선교수들에게 부여돼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한양대 교수들의 대자보 게시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시대에 말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나온 교수들의 대자보는 도리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 대자보가 우리나라의 '말없는 다수'(silent majority)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

역사는 아무리 표면적으로 시끄럽고 불안정해도 그 큰 수레바퀴는 결국 말없는 다수가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없는 다수가 때로는 필요할 때 말을 해야 하고 또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말없는 다수는 입이 있으면서도 말을 못했고 뜻이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못했었다.

우리는 이 대자보가 대학 내에서 더 이상 진실의 발설을 막고 생각의 자유로운 표현을 주눅들게 하던 모든 편견과 오만에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그 대자보가 스승이 제자를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꾸짖을 수 있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이것이 극좌가 곧 진보가 아니며, 그것이 곧 선이 아니라는 기초적 진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기대한다.

이제 대학을 정치집회 장소로 여기는 것 자체가 치욕이며, 캠퍼스를 망치는 반교육적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지성의 행동화', '행동의 지성화'가 함께 일어나 지성과 행동이 조화롭게 결합돼야 할 때이다. 그러면서도 대학은 "행동에 의한 현실 접근이 아니라, 인식에 의한 현실 접근"이라는 철학자 칼 야스퍼스(K. Jaspers)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8. 대학과 정치와의 관계

국회가 학문의 장이 될 수 없듯이 대학이 정치의 장이 될 수는 없다. 대학과 정치의 관계는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을 소화해 주는 관계로 지속되면 그 사회와 집단은 원활한 발전속도를 유지하게 되고, 그것들의 관계가 보완 아닌 대립으로 가거나 서로를 배타적 존재로 간주하는 상황이 되면 그 사회는 지도이념의 혼돈상태에 빠지게 마련이다. 불행히도 이제까지 우리나라에는 후자의 관계가 주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정치의 부당성이나 독선적 가치주입은 대학에서 끝내 거부되어왔고, 대학에서 외면 당한 정치는 대학을 체제 밖으로 몰아내려는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대학 역시 지성적 포용보다 물리적 항쟁을 우선하는 행동주의에 몰두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대학이야말로 지난 한 세대 동안 사

회불만의 근원이었으며 사회평화 부재의 가장 두드러진 지표였다. 대학 평화상실의 근본적 원인은 불의의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반항, 군사정권에 의한 대학권위의 조직적인 파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평화를 회복키 위해서는 대학의 소요가 정치의 불의에 의해 출발되었던 만큼(1960년의 4·19) 정치가 정상궤도에 올라야 할 것이다.

정치와 대학의 관계를 일찌감치 정립한 정치 선진국에서는 대학 내의 정치집회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강형식을 빌어 정치인을 초청, 옥내에서 강연을 듣거나 토론을 벌이는 경우는 간혹 있어도 우리처럼 대학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캠퍼스를 각종 플래카드가 난무하는 대규모 정치연설장으로 만들고, 마침내는 폭력시위까지 벌이게 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다.

대학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구와 교육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대학의 정치화) 정치발전이나 대학의 지성적 자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들 스스로의 체험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국가인 미국의 대학에서 공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60년대말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젊은이들의 반전운동이 민권운동과 뒤엉켜 미국의 대학들이 한창 소란하고 혼란하던 때, 하버드 대학의 행정관을 일부 과격한 학생들이 접거하였으므로 학교행정이 마비되고 말았다. 당시 총장으로 있던 네이트 퓨지는 교무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론의 주제는 “경찰을 부를 것인가? 부르지 말 것인가?”라는 매우 어렵고도 간단한 것이었다.

학교장이 부르지 않으면 캠퍼스에 경찰이 한발도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다. 의견은 둘로 갈라져서 한쪽은 경찰을 불러야 하고(과격파 학생들이 교수들의 철수 권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었으니까), 한쪽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여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퓨지 총장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법과대학의 학장직에 있던 바크라는 젊은 교수는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행정의 궁극적 책임이 총장에게 있는 터이라 그는 소신대로 경찰을 불러 행정관을 접거한 학생들을 끌어내 행정관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 행정은 다시 정상화가 되었다. 그러나 임기를 아직 1~2년 남겨놓고 있던 퓨지 총장은 돌연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하면서 “나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유명한 한 마디를 남기고 임기전에 물러났으며 후임에는 자기와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던 법과대학의 바크 학장을 지명하였다. 바크는 그 덕분에 총장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버드는 계속 세계의 명문대학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하는 퓨지 총장의 그 한 마디는 과연 훌륭한 교훈이라 하겠다.

9. 참된 학문의 자유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전한 학생의 학내활동은 마땅히 대학의 자유에 입각한 보호를 받지만, 그것은 학문성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일이다. 즉, 학생들의 학구적 자세에서 기성사회의 모든 문제를 연구-토론

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까지 탓할 이유는 없다.

전체주의국가에서 대학은 정치에 봉사하여야 하며 또한 대학을 국가에 직접 종속하는 하나의 기관이 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학의 자유와 같은 것은 일고의 여지도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의 대학이 잘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오늘날 공산주의 제 국가에서 학문을 정치의 수단 또는 장식으로 하는 태도는 학문적 정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대학에서 학문은 정치의 편익에 봉사하는 시늬가 돼서는 안 된다. 대학은 한쪽의 색깔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편견으로 얼룩진 과장된 스케치가 돼서도 안 된다. 또한 대학을 무조건 국법에 대한 저항기관, 즉 레지스탕스의 장으로 되게 해서도 안 된다. 대학의 레지스탕스는 학문을 통해서 이뤄져야지 직접 폭력적 실행행사에 의한 정치적 행동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치는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기본적인 생명이다. 그 당연의 귀결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장으로서의 대학은 정치적·행정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진실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학에 공통적인 원칙으로서 인류가 자유를 위한 투쟁에 의해서 획득한 귀중한 유산의 하나이다.

일찍이 막스 베버(Max Weber)는 “근본적인 회의야말로 지식의 아버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참된 지식 - 학문 - 과 이데올로기의 다름은 전자는 상대적이며, 후자는 절대적인 점에 있다. 만일 대학교수가 자기의 주장을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것으로 설파한다면 그는 지식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설파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대학에서 연구의 자유는 결코 절대주의적이 아니라 상대주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 아니라 학문적이어야 한다. 또한 연구의 자유는 자기와 상이한 학설에 대해서도 관용성이 있어야 한다. 연구의 자유는 이와 같이 비판적 상대적이며 또한 타에 대해서는 관용할 의무를 수반한다. 그리고 만일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대학은 스스로 연구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 된다. 대학은 이데올로기의 장이 됨으로써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게 된다. 여기에 대학의 자유가 그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까닭이 있다. 대학의 자유와 가치를 침범하는 것은 단지 그 밖에 있는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압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위협은 대학 자신의 내부에도 있다. 대학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다같이 대학의 안과 밖의 양쪽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아직도 배움의 미숙한 단계에 있는 대학시절에는 좀더 다양한 이론과 서적에 접해보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의 장·단점을 논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이론을 현실에 대치시켜 그것이 전부인 양 행동으로 옮겨 정의의 투사로, 심지어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민주전사로 둔감하면서 폭력적인 만용을 휘두르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 하겠다. 이제 모든 주장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장하는 허위의 시대는 지났다. 더구나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는 소요사태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강의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 편견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오늘 의 주사파가 그 맹목적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적군파의 말로’를 향해 치닫는 것은 그들이 저학년 때부터 지하 독서클럽이나 이념서클

을 통해 주체사상을 일방적 배타적 폐쇄적으로 주입받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판적 상대적 사고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자기 성찰의 준거를 제공하고 세계이해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야말로 지금 대학교수들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그것만이 학생들을 어두운 이념의 터널로부터 구해내 학생 본연의 길로 되돌리는 방도일 것이다.

이와 같은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상아탑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인기정책을 쓰는 사이버교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지적 혼돈과 갈등을 명쾌하게 풀어주고 양심에 따라서 소신있게 처신하는 교수들의 대거등장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영어의 Professor는 “자기가 믿는 것을 고백한다”는 라틴어의 ‘프로피테리’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럼으로써 원숙한 학문적 깊이와 인간적 신뢰감으로 학생들을 자신있게 지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학다운 대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학문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자유와 질서가 조화된 세계상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유가 정신적 질서에 의해서 기율되지 못하는 경우, 학문의 자유는 생활의 질서있는 像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0. 대학의 사명

대학의 권위는 학문, 즉 진리탐구라는 고귀한 사명을 다하는 데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버드 대학 입구에는 ‘진리’(Veritas)라고 새겨져 있다. 이 말은 대학의 본질을 잘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 진리라는 말의 그리스 어원 자체가

‘아레테이아’(비은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한 곳에도 가려진 데 없이 드러내 놓고 보아야 비로소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은 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학이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온 모든 진리를 낱알이 습득·계승하고, 그 토대 위에서 기성의 진리에 대하여 그 眞否를 가릴 수 있도록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 진리를 발견·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조된 새 진리를 다시 미래를 위하여 축적하는 곳이라 하겠다. 즉, 진리의 과거로부터의 계승, 이에 대한 비판, 이를 통한 새로운 진리의 창조, 미래를 위한 축적, 또 다시 계승·비판·창조·축적의 무한궤도를 달리는 곳이 곧 대학이라 하겠다. 또한 대학사회는 지상에 그 전당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바라보는 시야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중세기에 세워진 대학(university)의 어원이 보편성(universality)과 일맥상통하는 것도 이치가 닿는 말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대학은 세계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대학 내에서 다루는 學의 대상, 곧 진리의 보편성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은 세계성과 보편성이 그 본질이다. 이와 같은 학문은 시공을 초월한 밝은 지혜로서 곧잘 풍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보려거든 먼저 그 나라의 대학을 보라는 말이 있다. 대학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축도요, 체온계와도 같다. 대학은 스스로 시대의 아픔을 앞서 앓는다. 그리고 대학은 스스로 시대의 웃음을 앞서 피워낸다. 사실 어떤 학문, 어떤 생각도 현실의 소재를 떠날 수는 없다. 대학은 다만 좁은 현실에서도 ‘넓은 현실’을 보아야 하며, 얕은 현실에

서도 '깊은 현실'을 꿰뚫어 볼 책무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혹자는 대학은 높은 의미에서 상아탑이 아니라 국가사회와 세계의 감시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대학은 국가사회와 세계의 나침반으로서 그 예리한 비판적 지성을 통한 실천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천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자유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가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연구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비합법적 또는 폭력적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째로 학외의 세력을 대학 내에 끌어들이는 행위는 대학의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폭력적 실력행사에 해결을 구한다는 것은 학문의 근본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해서 비합법적 행동을 시인하는 것은 학원의 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1. 대학과 학문의 가치중립성

대학은 민족과 인류의 건강을 진단하는 곳이어야 한다. 대학의 옳은 진단 혹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그때 그때의 정치적 압력에서 초월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학이 정치적 압력을 받아 권력의 시녀가 되면 개성이 없는 획일화된 비참한 사이버 대학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대학은 기성 세계관이나 기성 가치체계의 절대성만을 관철하려는 사상의 강제수용소가 되어서도 안 된다. 더구나 대학은 어느 하나의

기성가설이나 기성학설의 절대성만을 고집하기 위한 밀폐된 동굴일 수는 없다. 대학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혼자만이 사명의식이나 절대성·정당성 따위를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다. 대학을 이른바 자유와 개방의 광장이라 일컫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학이 누리는 '학문의 자유'는 따지고 보면 대학이 지닌 새로운 진리창조의 그 소중한 활력이 기성의 낡은 세계관이나 화석화된 가치체계에 의해서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낡은 과거를 회고·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골동품적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내일을 전망·구상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진취적·능동적·주체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성스러운 수련의 도장이라 하겠다.

일찍이 야스퍼스는 "대학이란 어떤 한 정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학은 마치 고지에서 전체의 산맥을 볼 수 있듯이 보편적인 시야를 갖고, 민족과 국가 내지는 세계의 대세와 방향을 측정하여 이를 위정자 내지 국민 또는 세계시민에게 제시할 책임이 있다. 대학은 민족과 세계 인류공동의 재산이다. 대학은 역사와 민족과 인류의 소유이다. 정권의 소유일 수는 없다. 더구나 한 계급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정권은 짧아도 대학은 길다. 정당적 선전이나 선동에 의해서 행동함이 없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인 학문의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이 학문적 인식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의 임무이며,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학생의 의무이며 또한 특권이다. 대학은 어떠한 사회적 정세하에서도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서 인류와 국민에게 공헌해야 하며, 가

령 전쟁과 동란의 와중에서도 이 임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어떤 특정의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에 봉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교육적 정열을 정치적 정열에 의해서 대치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의 포기이다. 대학은 특수한 정치의식을 양성하는 장소는 아니다. 대학을 정치투쟁의 장소로서 이용하는 것은 대학 본래의 사명에 반하는 것이며, 연구 및 교육의 장으로서의 대학에 필요한 환경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이 이데올로기의 장이 되면 대학의 자유가 그 내부에서 붕괴하게 된다.

대학의 자유와 자치는 어디까지나 연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대학의 자유는 연구와 강의의 자유이지 '프로파간다'와 정치활동상의 특권적인 자유는 아니다. 적어도 대학에서 자유는 진리탐구를 위한 자유여야 한다. 학문의 자유는 진리탐구를 위해 어떤 제약이나 선입견도 강요하지 않는 자유지성을 위한 안전장치이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불법 부당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 속하는 것이다. 대학은 직접으로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대학이 이데올로기의 장이 되면 대학의 자유가 그 내부에서 붕괴하게 된다. 만일 대학이 상아탑의 문을 열어 사회적 실천에 뛰어든다면 그 열려진 문은 역으로 당연히 국가적 사회적 諸力이 대학의 구내에 침입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령 대학에서 공산주의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강의하는 한계를 넘어서 공산주의를 이데올로기로서 선전하고 연구실의 혁명을 위한 기지로 삼고자 한다면 이는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이 다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첫째로 공산주의의 이론은 적어도 공산당원에 있어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신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공산주의는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주의적이며 학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이며 일종의 종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연구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대학의 자유와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로 공산주의는 학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천적인 정치운동이라는 것이다. 만일 당원인 교수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경우에 당원인 교수나 학생은 대학 자체의 결정보다도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의 자유는 연구와 강의의 자유이지 정치활동상의 어떤 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유는 아니다. 특히 당원인 교수나 학생은 대학의 결정보다도 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뭐라 해도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사실상 파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학생이 어떤 정당이나 유력한 정치사회단체에서 파견된 정치적 병사의 역할을 한다면 대학은 연구의 장이 아니라 정치의 장으로 바뀌어 학원의 자유가 침해될 받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공리공론에서 나온 이데올로기적 통제는 잘못된 과오를 영구화 할 뿐이라는 것이다.

교수나 학생이 어떠한 정치활동을 하느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시민, 한 국민으로서의 자유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수 내지는 학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활동상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 대학은 국가 속의 독립한 소국가도 아니며, 대학인은 정치적 특권계급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대학도 국법의 틀 속에 있는 것이지 대학이 치외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과격한 학생이 운행중인 기차를 멈추게 하고, 국방부에 난입하고, 대낮에 파출소에 불을 지르고, 쇠파이프로 난동을 부리는 것을 '극명한 불법행위'로 다루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탈법·불법행위의 성격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치와 연구의 자유가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부정하여 직접적으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문란케 한다면 이는 정당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지금 문민정부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주사파의 이념투쟁은 이미 학생운동의 차원을 넘어선 체제도전 활동이자 합법적인 정부를 부인하는 무정부적 행동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이해』란 교재의 내용이 문제시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시인 자유민주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체제부정과 전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술되었다는 점과 이 책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 또는 민족민주운동노선이라는 대항이데올로기가 북한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독의 헌법에서 “학설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5조 3항 참조)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법은 대학의 자유가 손괴되지 않도록 입법되고 운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학에서 학문은 어디까지나 막스 베버의 이른바 가치중립성(Wert Freiheit)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대학은 가치로부터의 자유 내지는 가치중립을 이념으로 하는 곳이지 가치판단을 성급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옮겨서 강요한다는 것은 진리가 무한의 탐구라고

하는 점에서 보아 독선에 불과하며, 특히 정치 등에 관계하는 경우에는 데모크라틱하지 못하다. 정치는 의회를 통해서 행해져야 한다.

원래 막스 베버가 Wert Freiheit, 즉 가치중립을 처음으로 주장하게 된 것은 당시 '파쇼' 체제에 동원되는 학원이 정치권력에 좌우되거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벽이 곧 '정치적 중립'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학원의 정치적 중립은 학원이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보호수단으로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 체제주의국가에서 대학은 정치에 봉사하여야 하며, 거기에서는 대학의 자유와 같은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날의 소련과 동구권, 오늘의 북한의 대학이 정치권력의 시녀, 도구화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학문의 당파성은 학문의 자유를 송두리째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상대학교의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서설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모순이 존재하는 계급사회에서는 학문적 중립이란 있을 수 없고, 피지배계급, 곧 억압받는 민중의 편에 서는 것이 올바른 사회과학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사회관계에서는 갈등과 협조가 공존하는데 갈등관계로만 파악한다는 것은 편파적인 시각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오늘날 동독을 비롯한 모든 옛 공산국가에서 “대학 교과내용을 서방의 대학처럼 바꾸고 있는 중이다. 마르크스주의도 교조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들은 모조리 쫓겨났다”고 한다(韓昇助稿, “『한국사회의 이해』, 무엇이 문제인가”, 『국정신문』, 1994년 8월 29일자, 4면 참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여 마르크스

주의적 시각밖에 머리에 든 것이 없는 교수들이 강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삼을 것인가, 수치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가치중립(Wert Freiheit)의 의미는 학문이 정치와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은 한국사회에서 최대의 지적 정력의 집합체로서 권위있는 발언권을 가져야 함은 물론, 그들은 전문성과 학문적인 업적을 가지고 국내·외에서 치열한 지적 경쟁을 주저말아야 하며 학원 내에서 훌륭한 스승으로서의 행적을 쌓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은 자유로이 정부나 사회에 대해서 광적이며, 선동적인 이데올로기의 선전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들이 활발히 대외적인 발언을 하는 지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만큼 미숙한 학생들이 목칭을 높여야 할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수들의 정당한 사회적 역할과 정신적 권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학문의 소산-지식-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선악이 갈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학자의 지식을 제공하는 일, 파는 일은 지식 그 자체의 진실성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이라는 도구를 인간적·인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을 학자라 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에 유리한 지식만 골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을 주어 지식제공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도 한다.

학문이라는 장터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학문의 오용이라는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지식을, 어떻게, 누구

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학자는 비난받기도 하고, 찬양받기도 한다.

12. 맺는 말

대학은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갖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와 교육이 그때 그때의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대학의 자유에서 발견되고 얻어진 진리가 때로는 위정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칸트(Kant)의 말과 같이 자유를 존중하며 그 진리를 보배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의 진리는 어느 특정기간의 정치적 이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의 진리란 어느 정도 현실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학은 한 사회 전체의 머리와 가슴이지 어느 개인, 어느 집단의 것일 수 없다. 대학이 한 시대를 통치하는 집단의 자의의 종속물 또는 도구로 된다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대학이 어느 한 가지 교조적 주장에 의해서 지배되면 사망해 버리고 만다. 대학은 참(眞)과 곧음(正)이라는 기준을 준수하는 한,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 모든 주장, 모든 믿음을 다같이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진리와 선은 모든 주장을 검토하는 가운데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 미리 정해놓은 틀 속에서 발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학의 자유는 이렇듯 한 사회가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불가침이어야 한다. 힘으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를 자기에게 예속시킨 통치자는 자기 잘못의

확대재생산의 순환 속에서 길을 잃고 자멸하였다.

슬기로운 사회나 국가는 대학을 아낀다. 대학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모든 배려를 다한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나무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유를 토양으로 하면서 싹이 트고 무성해지기 때문이다. 즉, 대학은 '자유'라는 토양 위에 싹트고 무성해지는 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또한 슬기로운 사회나 국가는 대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학을 올바르게 이용한다.

이제 주사파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는 대학사회에서 배격되어야 한다. '학문의 자유'라는 구실 아래 역사적 평가가 끝난 공산 이데올로기로 대학을 오염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학사회에 극좌이데올로기가 만연하게 되면 참된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사멸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수준높은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은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늘날의 진리는 최종적으로 계시된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라 가설적인 것이며 부단히 수정되고 확대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조정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학인은 인생의 황금기인 학창시절에 공부한 만큼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좁고 얇게 공부한 사람은 졸업 후에도 사회의 기여도가 좁고 얇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재학중 한 눈 팔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는 일이 가장 우선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메테르링크의 명작 『파랑새』에서 '행복의 새'를 찾아 여행을 나선 치르치르, 미치르 두 남매의 이야기가 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헤치고, 미지의 나라들을 찾아가 보았으나 '파랑새'를 찾을 수도 손에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여행에 지쳐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행복의 새'는 거기에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학생은 학문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때 '행복의 파랑새'를 찾을 수도 손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대학들은 80년대의 암울했던 진통을 말끔히 정리하고, 선진국의 대학들처럼 21세기를 예비하는 면학의 대학으로 젊음의 패기와 지성이 용솨음치는 평화와 협동과 낭만의 광장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요컨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대학교육은 기필코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며 대학의 도서관과 연구실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켜있는 동안 우리의 장래는 흰하게 밝아올 것이다. ■

정요섭/고려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숙명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 『선거론』, 『한국여성운동사』, 『현대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대학의 임무와 사명』 등이 있고, "현대정당의 기능과 한국정당의 병리현상"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